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김유미 연구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70년대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 또한 졸업 및 초혼연령의 증가로 30대의 인구이동은 20대 수준에 가까워짐. 권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대의 인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호남권은 10~30대,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발생함. 이와 같은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의 차이는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경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지역 인구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 인구이동 문제를 함께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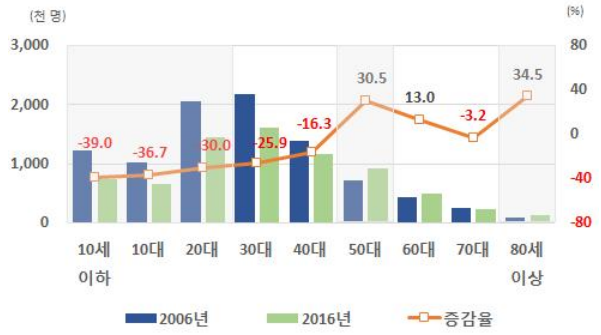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70년대 이후 최저수준을 보임.

- 통계청[1]에 따르면 2016년 인구이동자 수[2]는 총 737만 8천 명, 인구이동률은 14.4%로 이는 각각 1979년 인구이동자 수 732만 4천 명과 1973년 인구이동률 14.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저출산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저조한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 인구이동률을 감소시킴.[3]
  - 연령대별 인구이동자 수를 2006년과 비교해보면 10 · 20대는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50대와 80세 이상은 30% 이상 증가하였음(〈그림 1 (a)〉 참조).
- 졸업 및 초혼연령 증가로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인 취업 및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30대 인구이동률은 20대 인구이동률 수준에 가까워짐(〈그림 1 (b)〉 참조).
  -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23.6%, 직업 21.0%가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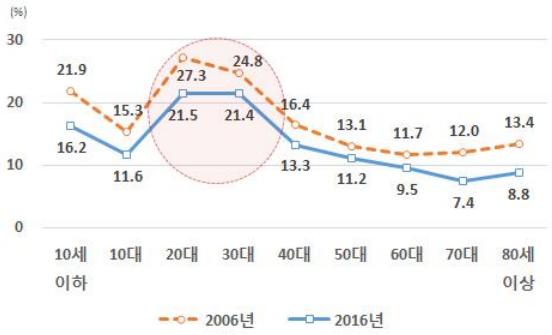
1) 통계청 보도자료(2017. 1. 25),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
2) 인구이동자 수는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의 수를 의미함.
3)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연령별 인구이동률은 20대가 21.5%, 30대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후에는 10% 이하로 낮게 나타남.

〈그림 1〉 인구 및 인구이동의 변화(2006년, 2016년 비교)

(a) 인구이동자



(b) 인구이동률



자료: 통계청.

■ 권역별[4]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호남권은 10~30대,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인구유출이 발생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에 차이를 보임.

〈표 1〉 권역 · 연령별 인구이동 패턴

구분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도권	유출	유입	유입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중부권	유입	유입	유출	유입	유입	유입	유입
호남권	유입	유입	유출	유출	유출	유입	유입
영남권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유출	유출

■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의 차이는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지역 경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늦춰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5]
- 또한 노년층보다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의 확대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일자리 경쟁심화,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4) 수도권은 서울 · 인천 · 경기, 중부권은 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호남권은 광주 · 전북 · 전남, 영남권은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으로 권역을 구분함.
5) 이상림(2014), 「시 · 도 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있으며, 청년층의 높은 인구이동률로 인해 추후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음.

- 호남권과 같이 노년층의 인구유입과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영남권과 같이 전 연령의 인구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수침체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음.

■ **인구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그 지역의 인구구조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시 출산장려 및 노후소득 강화 외에도 인구이동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출산장려 및 노후소득 강화 정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수준임.[6)]
- 지역 인구구조는 연령대별 인구이동 패턴에 따라 저출산 · 고령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음.
  - 실제로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많은 시도인 호남권, 영남권의 경우 출산율이 낮고 노인부양비가 높은 편임.[7)] KiRi

6) 정부는 2006~2014년 제 1 ·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분야의 보육지원 확대 등에 66.6조 원을, 고령사회 분야의 기초(노령)연금 등에 43.2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10년 이상 정체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7) 2016년 시도별 출산율은 전국평균이 9.0명인 것에 비해 부산 7.0명, 전남 7.2명, 강원도 7.3명, 대구 · 전북 · 경남 7.7명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부양비는 전국평균 18.5명인 것에 비해 전남 34.6명, 전북 27.9명, 경북 27.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